

3, 漁港投資 얼마나 해야하나

指定港基本施設만 완비하더라도

3千2百62億원

꼭 必要

“어항을 더 많이 튼튼하게 지어달라” 가는곳 마다 어민들은 아우성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마다 「어항건설」은 어민들의 단골 요구사항이다.

어민들의 이같은 주장은 생업유지와 재산보호 측면 말고도 생명보호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란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충분한 어항을 통해 그들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인간본능을 충족코자 한다.

당국인들 어항건설의 중요성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아직 태부족한 까닭은 손쉽게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받아 넘긴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항을 늘리지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어항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떠들썩한 마당에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어항시설 하나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항은 어업의 근거지로서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지일 뿐 아니라 어촌지역사회의 중심체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한다. 여기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호역할까지 하는 등 공익시설이다.

그러나 어항은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도로 등과 같이 모든 국민이 직접 보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 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등 모든 시책에서 다른 공공시설분야에 비해 예

산편성이 보잘것 없다는 점만으로도 그렇다.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생활도 괄목하게 향상되었고 국제사회에서도 신흥공업국으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촌사회의 핵이랄 수 있는 어항은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공업화전략에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도시와 타산업지역과 발전의 균형을 잃었던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76년까지 10년간 어항개발에 연평균 14억원을 투자했고 그후 81년까지 10년간은 모든 36억원을 투자한 데 그쳤다.

그나마 본격적인 투자는 5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인 82년부터 86년까지이며 이 기간에 어항 시설투자가 다소 늘어났을 뿐이다. 일본의 87년도 한해 어항 투자실적 1천7백억엔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적이다.

따라서 어민들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낙후되어 있는 어항개발이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어항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기본시설의 완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된 어선은 9만3천37척으로 지난 62년도의 4만5천5백4척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났다. 어선척수만 늘어났게

아니라 총톤수면에서도 62년도에 16만 2천톤이던 것이 88만 4천톤으로 다섯배반이나 증가됐다.

이로 인해 수산물생산량은 62년도에 47만톤에서 지난해는 3백33만2천톤으로 무려 일곱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어선규모의 대형화와 물동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어항의 수요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현안이 되고 말았다.

해선이 1만 2천 8백km나 되고 3면이 바다인데다 3천여개의 섬을 갖고 있는 「수산대국」으로선 어항간의 평균거리가 33km나 되고 80%가 넘는 소형선박이 손쉽게 피항할 수 없다는 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기상 해양 등 자연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정부가 7차에 걸쳐 어항정비계획을 수립, 2조 7천 8백억엔(16조6천8백억엔)을 들여 새 해양법시대에 대응하는 어항의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민간투자도 국민총생산의 0.06%, 수산예산의 53% 이상을 어항정비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3백50억원 정도로 국민총생산의 0.04%, 수산예산의 38%에 지나지 않아 일본의 어항개발투자에 비하면 그 규모면에서 크게 뒤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의 태풍 진입로권안에 놓여 있어 연례적으로 태풍 폭풍 해일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연평균 어선 7백 23척과 어항 1백 84개소가 재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따른 수산피해액이 무려 1백 21억 1천 2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87년에는 「셀마」 및 「다이너」호등 대규모 태풍으로 어선 6천 5백 93척을 포함, 시설 피해가 6백 73억 4천 5백만원이나 발생했다. 이같은 엄청난 피해는 두말할 것 없이 어항 기본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어항시설은 어선의 수용수요에 절대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항도 그 규모가 적어 항내가 매우 비좁아 황천시는 밀집대피로 인해 어선끼리의 충돌피해가 크고, 특히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80%이상이나 됨으로써 항내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는다.

소규모 어항은 간이시설로써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지방관리 어항은 개발수요에 비해 재정이 부족해 해양의 물리적조건 조사나 지반조사 등 과학적 기초조사가 미흡함으로써 내구력이 허약하다. 설제파고이상의 파랑내습시 방파제 월파 및 체파손으로 어선과 어촌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 어민은 항상 불안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어항은 어선안전을 위한 역할 뿐 아니라 생산활동과 유통 기지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된다. 여기에 새해양시대를 맞아 국내외적으로 어업정세가 크게 변화해 90년대에는 2백해리 경제수역내의 고도이용을 위한

연근해 종합개발의 거점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국민소득증대와 경제사회의 변모로 어항은 해양성 관광과 레크레이션 도입, 도시와 어촌 간 교류의 장소로서 그 기능이 다양화될 것이며 어항과 어촌의 공간활용은 매우 유용하고도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는 지적이다.

따라서 어항이 이같은 시대성에 부응토록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며 국토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어항과 해안의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어항개발의 장기적 계획수립과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수산청이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어항개발장기계획과 예산지원요청을 주목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오는 91년까지 6천 4백 33억원을 투자, 총연장 4백 3km의 시설을 완공하고 2천년도까지는 어항정비 사업을 벌여 모든 어항의 안전 수용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천 87억씩 모두 3천 2백 62억원을 투자, 항별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투자로 완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92년도부터는 항별 시설수요를 다시 판단, 소요시설을 확충하고 어항시설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한편 노후·취약시설은 개·보수함으로써 어항기능을 최대한 높여 휴식처 등 관광지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의거, 수산청은 내년 2만 3백 25m를 새로 시설하고 83개의 어항을 완공, 7백 2개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8백 10억원이다.

수산청은 또 이미 착수한 항을 조기 완공하고 방파제 등 외곽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등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방향을 설정했다. 어항기능을 높이기 위해 노후·취약시설을 보강하고 기존시설 유지관리에도 역점을

더우기 정부의 산업간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도 어항개발에 필요한 예산증액은 요구된다.

둘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 4백 83억원으로 4천 8백m를 시설할 계획이지만 이는 앞으로 건설계획물량 6만 3천 6백 45m(1.3중)중 7.6%밖에 안되는 것으로서 지정항만 완비하는데 13년이상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어항시설의 긴요성을 감안, 연간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 기간동안 지정항에 대한 기본 시설만이라도 완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특히 어항예산의 비중이 일 본과 같이 수산예산의 53%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하루빨리 어항을 완비해 어민들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우선 어항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중요한 만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년대비 몇% 증액이라는 종래의 예산편성 방침이 적어도 수산분야엔 적용되어선 안된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당초 수산예산 규모가 적은데다 그동안 증액비율도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전년대비식의 예산편성은 설득력이 없고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정부의 산업간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도 어항개발에 필요한 예산증액은 요구된다. 1백개를 가진자의 10%는 10개인데 비해 10개를 가진자의 10%는 1개밖에 안된다는 산술적 이론을 정부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언제까지고 전년대비방 침을 고집하면서 예산타령만 한다면 낙후된 수산분야, 가난한 어민은 희망이 없다. 낙후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지금 수산분야가 바로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